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 상 국

도시의 산소 탱크, 가로수 터널

지난 18일 폐막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는 130여 나라 정상들이 참여한 그 규모 면에서나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세계의 환경운동가들 수만 명이 매일 회의장 밖에서 벌인 환경 관련 시위만으로도 지구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 '말만 하지 말고 지금 행동하라' '부자 나라는 기후변화의 빚을 갚아라' 등의 시위 구호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의 마지막 희망 메시지, 그 절규만 같았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높은 굴뚝을 쳐다보며 우려했던, 인간 스스로 자초한 지구의 재난, 곧 인류의 멸망을 예언하는 여러 징후들은 남극 대륙의 빙하가 녹으면서 생기는 해수면의 상승 수치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무 심는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다든가 강원도 영서지방에서는 그 식재가 쉽지 않던, 주렁주렁 열매를 단 감나무들을 보면서 어찌 기후 변화를 실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벌이고 있는 갖가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각종 녹색성장 사업이야말로 지구 살리기는 물론 그것이 곧바로 우리 모두의 건강과 복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녹색은 색채 구분으로 볼 때 안전·진행·구급·구호 등을 뜻하는 안전색채로 통한다. 더 넓게 우리는 살아 있는 자연만을 녹색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녹색이 곧 생명이며 그 구원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 녹색이, 생명의 원천인 자연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본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녹지의 걷잡을 수 없는 도시화는 물론 골프장 등 산림의 난개발로 수십 년 된 나무가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구호가 왜 그리도 허황된 말로 들리는지. 자동차 한 대가 한 달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일 년에 800그루 이상의 잣나무를 심어야 한다니 오랜 세월을 우리와 함께 산 나무들의 그 주검이 어찌 예사로 보이겠는가.

온실가스 배출 그 공해를 줄이기 위한 답은 처음부터 있었다. 나무가, 숲이, 자연이 그 그을음을 정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이룬 저 숲이 바로 녹색 생명, 산소 탱크라는 사실. 모든 나무는 인간이 해치지 않는 한 인간보다 몇 배 더 긴 시간을 이 지구에 머물면서 묵묵히 지구를 정화할 것이다. 마을의 한 그루 정자나무는 수백 년 동안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됐음은 물론 그 마을 사람들의 삶을 정화하는 신목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수백 년 나이의 고목들이 터널을 이룬 파리 등 유럽 여러 도시의 가로수 거리를 생각한다. 청주의 관문인 플라타너스 터널 길을 지나면서 그 가로수를 지켜낸 이들의 위대한 승리를 생각한다. 무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대구가 푸른 도시 가꾸기로 온도를 낮춘, 담 없는 건물들과 하나가 된 근린공원이며 가로수길 등 도시의 그 숲을 걸으며 놀라고 놀란다. 경주의 보문단지 가로수 길을 차로 달리면서 새삼스레 고도의 자연을 예찬한다.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 벚나무 아치로 도심 속의 숲을 가진 진해·하동 등 가로수 터널을 가진 도시들을 지날 때마다 그 속에 사는 시민들이 달리 보였다.

그러나 이 겨울 터널은커녕 가지들이 모두 뭉툭 잘려나간 채 그 나무줄기만 앙상한 고목 가로수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녹색 성장에 역행하는 검은 그을음 살리기를 저지르고 있는 여러 도시의 가로수 관리를 고발한다. 고목 한 그루가 전봇대 수십만 개보다 몇 배 더 효용가치가 크다는 것을 그들은 정말 모르는 것인가. 나무들이 그 수난 속에서도 저처럼 거대한 고목이 될 때까지 전깃줄을 땅 속에 묻을 생각도 못한 관리들의 그 무능을 나무의 이름으로 성토한다.

지구 기후 변화의 주범, 온실 가스 배출 피해를 줄이는 가장 가까운 길, 산과 물이 도심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는, 도시의 숲, 가로수 터널로 녹색도시를 디자인하자.

〈소설가·김유정문학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 신 곤

신종플루의 교훈

신종 플루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정부에서도 전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었다.

군인들의 외박, 외출이 허용돼 인근 지역 경제도 한숨 돌리게 되겠다. 역사적으로 스페인 독감이나 홍콩 독감이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다. 아직 국지적으로 창궐의 위험성은 있지만 대세는 기울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절기에 겪는 일반적 독감과 무엇이 달랐나. 이삼일 고열, 인후통, 근육통으로 고생하다 푹 쉬면 좋아지던 병 아니던가. 국가적인 재난으로까지 법석을 떨었던 이 전염병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우리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둘러싸여 그 속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의 재확인이다. 폐렴균, 대장균, 식중독균, 그리고 결핵균까지도 아직 주위에서 왕성히 맴돌고 있다. 우리 인간은 세균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꼴이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공중위생 시설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사람들의 평소의 면역력이 중요하다. 어떤 질병이 다가와도 자신의 몸이 이겨내면 병은 물러나게 된다. 평소의 운동, 적절한 영양섭취, 휴식, 금연, 적당한 음주, 때맞은 검진과 예방 접종 등이 우리의 질병에 대한 방어 능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 준다.

셋째 일상의 위생적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기침 예절이나 손 씻기 습관 등이 전염병의 전염성을 크게 줄인다. 이번 신종 플루 사태에서도 손 씻기를 강조하니 안과 환자가 줄고 식 중독 발생률이 덩달아 줄었다는 것이 좋은 본보기이다.

넷째 차분한 당국의 대처와 평소의 전염병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 공항에서부터 열감지기를 동원하고, 학교 정문에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열을 측정하는 등 법석을 떨 것이 아니다. 같은 시기에 미주나 호주, 동남아를 여행한 사람들은 다 보고 느끼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공항의 풍경이었다.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전시적인 행정이나 쇼 적인 행태는 버려야한다.

다섯째 의학적인 사실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독감 바이러스는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종을 형성할 것이다. 그때마다 신종이라고 놀랄 것이 아니라 체계적 전염병 관리, 정확한 의료 통계, 효율적인 백신 개발, 예방 접종, 각자의 위생 규칙 생활화 등으로 임하면 보통 독감과 별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여섯째 세계화, 글로벌화 시대에 정보를 종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환절기로 독감의 계절에 접어들 때 호주 등 남반구는 이미 독감을 겪은 뒤이다. 호주의 통계에서 신종 플루의 사망률이나 합병증이 평소 독감보다 더 낮다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연 앞에 겸손해야한다. 한때 우리는 항생제 개발로 모든 세균을 정복했다고 착각했다. 사라지리라고 믿었던 결핵균은 이제 내성까지 생겨 훨씬 난치의 질환이 되었다. 바이러스 변화 또는 현대 의학으로 따라잡기 쉽지 않다.

이번 신종플루 사태를 통해 인간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재확인한 셈이다.

〈상무병원 외과 명예원장〉

기 고

김 영 주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은 금물

앞으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되면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몰고 다니는 사용자가 다르고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일명 '대포차'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대포차는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정기검사도 안 받는다. 자동세도 안내고, 교통위반 범칙금도 안 낸다. 모든 책임을 등록소유자에게 떠넘기고 의무위반 통지서는 물론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무인카메라에 찍혀도 범칙금 고지서조차 전달할 방법이 없다. 현재의 사용자가 어디에 사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에 지난 3년간 접수된 대포차 피해 민원은 무려 500여 건에 이른다. 피해사례를 보면 견인업체에 분명히 폐차 의뢰했는데 그 차가 대포차가 되어 도로를 활보하는 차량이 많다. 또 매매 이전 등록 서류를 넘겼는데도 소유주가 바뀌지 않아 전 차주 명의로 교통위반고지서가 배달되는 것도 많다. 오래전에 판 차가 이전되지 않아 기초생계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대포차를 거래하는 업주들의 수법도 교묘하다. 노숙자 명의로 자동차 매매상사를 개설한 후 인터넷이나 브로커를 통해 매매상사 명의로 차를 등록해 줌과 동시에 폐업처리해 소유자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유통된 대포차가 수 만대에 달한다. 이때 택시나 장애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LPG 차량도 판매용 등록이 가능한 제도를 악용하여 대포차로 유통시키기도 한다.

문제는 처벌 규정이 미약하고 단속권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데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미가입 자체는 3백만원 이하 과태료)되어 있으나, 100만 대에 달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수사권은 시·군·구청별로 한 두 사람 뿐인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 단속권이 없다는 건 법규 제도상의 큰 문제다.

권익위는 이런 현행 제도를 고쳐 경찰관이 소지한 PDA 단말기로 길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를 적발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체납 세금과 범칙금 강제징수를 위해 인근 시·군·구청에 넘겨 공매처분하도록 제도개선에 들어갔다. 아울러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면허정지까지 면허벌점도 병행토록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대포차 운행자가 현행범 체포를 피해 책임보험에 대거 가입하고, 연간 만 여건에 달하는 무보험·뺑소니차로부터 선의의 피해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 가입자료 덕분에 대포차 주인도 알아낼 수 있어 체납된 세금과 범칙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자동차검사를 안 받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하고 차는 바퀴에 족쇄를 채워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안전규제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개념조차 없는 대포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근절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민원과장·완도 출신〉

기초질서 확립, 사회구성원 자발적 의지 필요

2009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수많은 모임의 홍수 속에 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자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다. 하지만, 반가운 사람들과의 한 두잔 속에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례를 발견하곤 한다. 기초질서를 무시한 우리네 이웃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기초질서의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사회나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율이나 예절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질서위반이 우리네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난다.

왜 이럴까? 우리는 수많은 교육을 받아왔고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대물림한다. 그런데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그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는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여기에 불법과 무질서 등 법질서가 경시되는 풍조가 한 몫을 한다.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사이에 질서를 요구하는 자발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내일 또 송년회다. 어떤 질서위반을 보고 눈을 돌려야 할지 벌써 걱정이다.

▲박영복·구례군청 총무과

친부모 동의 없이도 입양가능케 제도 마련을

지인이 양아들을 두었는데 양아버지와 성이 다르다 보니 학교나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는다. 그래서 양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친부의 소재지를 알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재 이 친양자 입양법은 15살 미만 입양자녀의 경우, 양부모가 친부모 동의를 받아 친아들 혹은 친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도록 돼있다. 성씨도 다른 친자식처럼 양부모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양육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는 친부모가 입양 동의를 거부하면 대책이 없다.

그러므로 장기간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양에 반대할 때는 법원이 직접 부모의 동의에 준하는 심판을 내리는 제도가 필요하다. 부모가 마약이나 알코올중독, 혹은 가정폭력 등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면 입양이 성사되도록 법적인 보호와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태웅·광주시 서구 서창동

사 설

지역민들까지 살리기에 나선 금호그룹

호남 유일의 10대 그룹인 금호그룹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 내년 1월 15일까지 대우건설 매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금호산업 등의 경영권이 넘어갈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호그룹은 대우건설 인수 약정인 '풋백옵션'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과 자회사를 처분하는 강도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계속해 왔다. 금호가 조달해야 하는 현금은 4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대우건설 매각 협상이 불발에 그칠 경우 풋백옵션 행사에 필요한 대금 확보가 안돼 각고의 회생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

금호의 유동성 위기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호는 1946년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이 미국산 중고택시 두 대를 사들여 설립한 광주택시가 모태가 돼 오늘날의 대기업으로 도약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호남을 상징하는 그룹이기에 금호에 대한 지역민들의 애정은 각별하다. 민간 기업임에도 광주·전남·북에서 3만 명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살려달라'는 호소문에 서명할 정도다.

금호의 위기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우려된다. 재계 서열 8위(공기업 제외) 인 금호의 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금융권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등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나라 경제에도 큰 부담이다. 금호가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초 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전통이 깨지기는 했으나 금호그룹은 오랫동안 형제 경영의 모범을 보여왔다. 특히 아트홀과 미술관을 건립하고 예술인에 대한 대대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국내 대표적인 '메세나 기업'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간직해 왔다. 금호그룹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업 슬로건에 걸맞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교원평가제 평가방식 보완부터 서둘러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교원평가제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도 교육청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지난 2000년 이래 10년의 교육 현안이다. 교원을 공정하게 평가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시간을 정해 밀어붙이기보다는 모든 교육주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식 모델부터 선정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교과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서두르는 것은 자칫 많은 부작용만 낳아 교육현장의 분란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 중인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지역 시범학교 가운데 교사평가에 참여한 학부모의 신분이 노출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달 초 온라인 교원평가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담임교사로부터 "평가 결과를 잘 봤고, 고맙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학부모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 교사들의 실력과 업적이 정량적으로만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 평가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교원평가제를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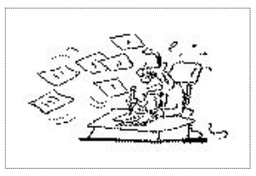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시행이라는 업적에 집착해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선만 빚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제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제도라 해도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방식부터 보완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데드라인

'마감 증후군'(Deadline Syndrome)이라는 게 있다. 내내 집중이 되지 않다가 마감이 임박해 글이 잘 써지거나 시험 전날 하는 공부가 더 쏙쏙 들어오는 현상이다. 학창 시절 '벼락치기'로 시험공부를 해본 사람이면 한번쯤 경험해 봤을 것이다.

왜 그럴까. 마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에 비례해 교감신경 활성도가 올라가면서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된 때문이다. 대신 벼락치기로 외운 정보들은 쉽게 잊어버린다고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장기 기억을 방해하는 데다, 반복되지 않는 정보는 저장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벼락치기에만 기대지 말고, 장기 학습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공략하라는 얘기다.

데드라인을 정해 몰아치기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 저것 미루는 '차일피일 병'에 걸렸다면, 마감 증후군을 활용하는 것도 지혜일 듯 싶다.

미국 듀크대 댄 애리얼리 교수의 실험은 미루는 습관을 떨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되새겨 봐야할 결과를 보여준다. 그는 학생들에게 내준 리포트를 ① 교수가 정한 시간 내에나 ②아무 때나 중 택일해 제출하게 한 뒤 어떤 경우에 성적이 좋은 지를 알아봤다. 흥미롭게도 ①의 상황에서 더 월등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 군축협상 등 굵직한 국정현안 처리를 위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내년 초까지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고, 국회도 연내 예산안 타결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 중이다. 조직의 긴장도를 최대한 높여 일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려는 전략이다.

결과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오바마는 의회 등 안팎의 반대에 주춤거리고 있고, 우리 국회도 싸움만 거듭하고 있다. 민의 수렴은 벼락치기로 안 되는 모양이다.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